

제2공항 예산 국회 부대의견 ‘아전인수’

반대측 “공론화 절차 인정, 도의회 힘 얻게 됐다”
제주도 “도민의견 반영 갈등 해소 노력하라는 뜻”

제주 제2공항 관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라는 국회 부대의견을 놓고 2공항 반대측과 제주도가 서로 달리 해석하면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예산 356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기본설계비 324억원, 감리비 32억원, 공항건설 업무지원 2000만원 등이다.

그런데 국회는 제2공항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부대의견을 달면서 이에 따른 해석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부대의견에 대해 이날 논평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가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회의는 국회의 부대의견은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고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국회를 찾아 여당 지도부 등과의 면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완료될 때까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및 제2공항 건설 관련 예산 편성 등을 보류해 줄 것”을 건의

했기 때문에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제주도측은 제2공항 추진에는 변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부대의견대로 추진과정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관계자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제2공항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도민공론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됐던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예산 부대의견은 최종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방부 예산안 편성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선행조사 예산은 전액 삭감됐지만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국방부가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포함시키자 “제주 제2공항은 곧 공군기지”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해왔다. 조상윤·부미현 기자



초겨울 고즈넉한 산사 풍경. 초겨울 추위가 물러나며 포근한 날씨를 보인 11일 한라산 관음사를 방문한 관광객이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계절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제2공항 균형잡힌 의견수렴 필요”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
도민의견 수렴방안 모색 워크숍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의견수렴 과정 설계시 이해관계자(갈등 당사자)와 일반시민 모두에게 균형 잡힌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의견 수렴 방법과 갈등 관리 및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법’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제안하면서 “의견수렴은 의제의 표출과 분류

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제 표출은 제2공항과 관련 모든 사안을 핵심 위로 올리는 것이며, 의제 분류는 표출된 의제를 압축하는 것으로 수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제의 표출 및 분류는 주민의견수렴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교수는 “의견수렴과정은 부족한 논리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서로 다른 논리는 토론(논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부족한 논리는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부족한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움을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재정분권 핵심은 개별소비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어제 지방분권 토론회

제주의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이나 카지노, 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11일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김흥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은 76대24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문재인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끌어올려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제주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재정특례를 활용한 재정분권의 실효성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자원시설세가 대표적”이라며 “이에 제주에서는 골프장과 경마장, 카지노 등으로부터 국세로 거둬들이는 개별소비세를 우선적으로 이양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도지사에 대해서는 “각 시·

도지사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대부분 여당 소속이라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경우 지사가 무소속이기 때문에 재정분권에 대한 중앙정부 포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이 보다 높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며 “재정에 관한 결정권이 지방정부에 더 많이 이양될수록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서비스 공급은 물론 지방정부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제주 내년 국비확보 1조5000억 사상 최고

국회 증액 173억 확보... 하수관로 등 현안 반영
농산물 해상운송비 실증연구 용역비 편성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액이 최종 1조 5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확보한 최종 국비는 기존 정부예산 확보액 1조 4945억원에 국회

증액 173억원을 합쳐 1조 511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도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요구에 대해 정부가 최종 실증연구 용역비 8억원을 부처예산으로 반영하면서 이번 국비 확보 노력의 최고 성과를

로 꼽히고 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용역’으로 농식품부에 편성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47.3억) ▷대정·안덕 하수관로 정비(19.18억)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15억)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2.4억) 등 시급한 환경분야 사업예산이다. 아울러 ▷4.3

평화재단 출연금(1.5억) ▷4·3 유적지 정비(3억)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전기차 충전서비스, 55억)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5억)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빙정비(3.5억) ▷국세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1.11억) 등 현안사업이 포함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용역 시행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긴밀한 공조와 관계 공무원들의 치열한 준비의 성과”라고 말했다. 조상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감귤농업인 및 유통인 여러분!!

감귤가격 안정화 노력에 자발적인 참여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올해 산 조생온주가 본격 출하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감귤은 물론 모든 과일이 제 값받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저한 자구노력만이 제주감귤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농가 스스로 자발적 출하조절 실천

- 2L과, 종결점과 등 도매시장 경락가격 5kg 상자당 3,800원 이하 감귤 가공용으로 처리

극소과(45mm이하)는 수상선과로 감귤원 자체 격리

- 시장 출하 감귤 품질 높이고 도외 출하량 감축

소비자 선호 완숙과 위주 감귤 수확

- 조생온주 품질기준 : 9브릭스이상

저급품 유통근절 및 출하조절을 위한 노력 경주

